

#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건 연구\*

채백\*\*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건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깊이 있는 연구 대상이 되지 못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미화되거나 혹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일장기 말소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 재평가해보려는 시도이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새로운 사실도 밝히고 있다. 그동안 일장기 말소 사건에 대해서는 1936년 8월 13일에 『조선중앙일보』가 『동아일보』보다 먼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 『동아일보』도 8월 13일자 조간 지방판에 『조선중앙일보』와 같은 사진이 실려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제의 통제 의도와 이에 대한 동아일보사의 대응, 정간 해제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경과에 대해서도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먼저 손기정의 마라톤 우승 소식 이후 『동아일보』의 보도 태도가 다소 달라져 보도에서 민족성이 되살아나는 보도들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보도 태도 때문에 일제도 방침을 바꾸어 일장기 말소 사건에 대한 탄압을 가했던 것이다.

일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김성수와 송진우가 완전히 손을 떼게 함으로써 『동아일보』를 환골탈태시키려 시도하였다. 이러한 통제에 대해 『동아일보』는 대립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총독부의 의도는 『동아일보』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김성수와 송진우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동아일보』의 무기 정간은 유례없이 9개월 넘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1937년 6월 『동아일보』가 속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 속에서 타협적인 태도로 선화하여 총독부의 의도를 수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주제어: 일장기 말소사건, 손기정, 동아일보, 언론사, 일제 강점기

---

---

\* 이 논문은 2006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bchae@pusan.ac.kr

## 1. 서론

### 1) 문제의 제기

이 논문은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사건을 분석, 재평가해보려는 시도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사건은 1936년 8월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시상식 장면을 『동아일보』가 보도하면서 일장기 마크를 삭제하고 보도하여 일제의 탄압을 받았던 사례이다. 1930년대 일제에 저항한 언론운동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어 언론사 관련 논저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를 다룬 저서들에서도 거의 빠짐없이 언급되는 사건이었다.

이처럼 널리 알려진 사건을 이 논문에서 재론하는 이유는 첫째로는 이처럼 중요한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 사건을 주제로 다룬 연구 논문으로는 모창배(1998)의 논문이 거의 유일한 것 같다. 그러나 이 논문도 체육학적 관점에서 기존에 알려진 사실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재정리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평가한 성격이 강하다. 그 외에는 시사잡지에 실린 저술들이 몇 편(이인숙, 1996; 鎌田忠良, 1983 등) 있을 뿐이다. 최근에 나온 최인진의 저술(2006)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반면 언론사 분야에서는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사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지 교과서적인 서술에서 기존의 논의들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반복하는 수준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새로운 논문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된 보다 중요한 이유는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몇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는 문제의 손기정 사진이 게재된 1936년 8월 25일보다 먼저인 8월 13일에 『조선중앙일보』가 게재했던 것과 똑같은 사진이 『동아일보』에도 같은 날짜 지면에 실렸다는 사실과 일제의 무기정간 조치에 대한 동아일보사의

대응과 정간 해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경과에 대한 것이다.

이 중 앞의 사실은 최인진(2006)에서 일부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지면을 여러 모로 검토해보면 당시의 조석간 체제에서 판결이가 이루어지면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여준다. 최인진의 저술은 이 점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한 무기정간이 해제되는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는 장신의 연구(2005)에서 당시 총독부 측의 자료를 인용하며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더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 논문은 몇 가지 새로운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재평가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또한 그동안의 논의를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시각의 여하를 떠나서 대부분 이 사건 자체만을 고립시켜 논의하는 경향이 강했다. 다시 말해 언론사적 맥락으로부터 유리된 채 사건의 경과나 규제 조치, 그 성격 등에 관해서만 논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당시 언론의 상황과 지면 보도의 흐름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분석, 평가해보고자 한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한국 사회에는 과거사 청산이라는 맥락 속에서 일제 강점기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는 있지만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부인하기 힘들며, 시기적으로도 매우 늦었다는 사실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장기 말소사건을 재평가하는 본 연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별다른 학술적 규명과 평가작업 없이 일방적으로 신화화되거나 폄하되어왔던 일장기 말소 사건을 학술적으로 분석, 규명하고 평가하려는 시도는 적지 않은 중요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 2) 기존 논의의 현황

### (1) 『동아일보』 지면에 나타난 일장기 말소사건

일장기 말소 사건에 대한 평가는 광복 이후부터 시작됐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가장 먼저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건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이길용 본인이었다. 1948년에 김사립 편으로 출판된 『신문기자수첩』이라는 책에 이길용이 “세기적 승리와 민족적 의분의 충격, 소위 ‘일장기 말살’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역시 사건 관련자였던 사진기자 백운선이 “사진기자 눈물의 회고, ‘카메라’와 ‘나’”라는 제목으로 조선공산당사건과 일장기 말살 사건 회고담을 실었다.

이를 계기로 이 사건을 미화하고 신화화하는 데 앞장섰던 주역은 바로 동아일보사였다. 광복 후 『동아일보』는 창간 30주년이 되는 1950년부터 창간 기념호를 발행하였다. 1950년 4월 1일자를 보면 4면에 걸친 창간기념호를 발행하여 1면 톱기사로 ‘피에 어린 민족항쟁의 거화(炬火)’라는 제목으로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총리, 공보처장, 서울대와 연세대 총장의 축사를 게재하고 부톱으로는 ‘본보 30주년을 맞아’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이어 2면에도 특집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장기 말살 정신, 동아일보의 빛나는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이길용 기자의 회고담을 실고 있다.

이어 1954년 4월 1일자 창간 기념 ‘본보 창간 34주년’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신들이 일제 강점기에 탄압받았던 사실을 거론하며 일장기 말소 사건을 “더욱이 생각하면 새삼스레 비분한 감회가 용솟음치는 것은 1935년<sup>1)</sup>에 백림 ‘올림픽’ 대회에서 우승한 ‘마라톤’왕 손기정 군의 흥장인 일장기 말살 사건으로 치명적 장기 정간을 당했던 것도 쓰라린 수난의 일면”이라고 자평했다.

이후 주로 창간기념일의 사설 등을 통해 “본보의 수난사는 곧 민족의 수난, 민주주의의 수난”(1956. 4. 1. 사설 ‘본보 창립 36주년’)이라고 의미 부여를 해온 『동아일보』는 1960년 4월 1일 창간 40주년 기념호에서 사설 ‘수난 투쟁의 근반세기: 본보 창간 40주년을 맞는 감회’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 일제 당국으로부터 탄압당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창간으로부터 해방전 중간에 이르기까지 무릇 20년 동안에 ‘압수’가 489회, ‘판매금지’가 63회, ‘삭제’가 2,423회, 그리고 ‘정간’이 4회에 이르렀다. ‘정간’ 가운데도

1) 1936년을 잘못 표기한 것이다.

백림 ‘올림픽’의 제패자였던 손기정선수 흉상인 소위 ‘일장기말살’ 사건은 가장 대표적이었다”라고 평가하기에 이른다.

바로 이 일장기 말소 사건을 자신들의 과거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창간기념일(예컨대, 1963년, 1967년, 1968년, 1975년, 1976년, 1980년, 1983년, 1984년, 1995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등에 자신의 역사를 미화하는 데 가장 즐겨 사용하는 소재가 되었다. 최근에는 사건 발생 70주년이 되는 2006년 8월 25일자 지면에 한 면을 할애하여 “일장기 말소는 편집국의 집단 거사”라는 제목으로 후술할 최인진의 연구(2006)와 이길용의 회고(김사림, 1948), 총독부 경찰 문서 내용을 기사화하고, 이 사건에 대한 부정적 평가 내용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웠다.

## (2) 일장기 말소 사건에 대한 학계의 논의

이처럼 『동아일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선 때문인지 학계의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 1955년에 나온 성준덕의 저술 『한국신문사』(121~122쪽)를 보면 이 사건에 대해 4줄 정도로 간략하게 개요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최준(1965, 318~321쪽)에 의해서였다. 특히 최준은 자신의 저술에서 『동아일보』에 앞서서 『조선중앙일보』가 먼저 일장기를 말소한 사진을 게재하였다는 사실을 날짜를 밝히지 않은 채로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조선중앙일보』의 일장기 말소 날짜를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논한 것은 정진석(1975, 90쪽)이었다. 정진석은 “8월 13일, 조선중앙일보는 ‘두상(頭上)에 빛나는 월계관, 손에 꼭 쥐 견묘목(桴苗木), 올림픽 최고영예의 표창을 받은 아손자(我孫子)’라는 설명과 함께 손 선수의 사진을 실었다. 이 사진은 원체가 선명치 못하므로 일제 검열관도 미처 주의를 하지 못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며칠 후인 8월 25일, 동아일보 석간에 실린 ‘영예의 우리 손군’이라는 제하에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 있는 손 선수의 사진이 실린 것은 드디어 크게 문제가 되고 말았다”고 서술하여 논의를 진일보시켰다. 이후의 연구들 예컨대 최민지(1978, 221~222쪽)나 김민남 외(1993, 236~239쪽), 김민환(1996, 235쪽),

주동황 외(1997, 36~38쪽), 강준만(2000, 270~271쪽) 등도 이와 대동소이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한편 동아일보사가 1975년에 발간한 『동아일보사사』를 보면 이 사건의 전개와 처리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면서도 『조선중앙일보』에 대해서는 날짜상의 선후 관계에 대한 언급 없이 “이 무렵 동업 『조선중앙일보』도 일장기 없는 손기정 선수의 사진을 게재하였다가 본보의 사건이 확대됨을 보고” 자진 휴간에 들어갔다고 간략하게 언급하였다(동아일보사, 1975, 367쪽).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일장기 말소사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1936년 8월 13일 『조선중앙일보』가 먼저 시도했지만 당시 사진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검열 당국도 모른 채 넘어갔다가 8월 24일에 발행된 8월 25일자 석간 2판에서 『동아일보』가 좀더 크고 선명한 사진으로 손기정 선수 가슴의 일장기 마크를 지우고 게재하자 총독부는 바로 규제에 착수하여 다수의 기자가 사직하거나 구속되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진일보시키고 새로운 사실을 제시한 것이 바로 최인진(2006)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관련 자료를 철저히 섭렵하고 사진 전문가의 관점을 잘 살려 사건에 대해 몇가지 새로운 사실을 제시한 중요한 성과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자료들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평가에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

우선 최인진(2006, 94~104쪽)은 사진의 출처를 원본 대조해가면서 동아일보 게재 사진의 원본 출처가 『오사카 아사히』의 남선판과 조선 서북판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그는 『조선중앙일보』가 먼저 일장기가 삭제된 사진을 실었던 것으로 알려진 1936년 8월 13일에 『동아일보』도 동일한 사진을 오려서 부분 게재하면서 일장기를 삭제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였다.

<사진 1>이 바로 그 문제의 사진이다. 이 사진은 뒤의 <사진 3>을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바로 밑에 손기정이 달리는 모습과 함께 제시되었다. 최인진(2006, 87~91쪽)은 이 2개의 사진 중 위의 사진이 손기정 가슴의 일장기 마크가 지워진 흔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전혀 제시된 바 없었던 새로운 주장이다. 사진에서는 다소 불분명하지만 최인진



<사진 1> 『동아일보』 1936년 8월 13일 조간(2면)

(2006, 89쪽)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일장기를 말소한 문제의 사진은 국내 신문들이 처음 입수한 것으로,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경기 후에 촬영한 시상대에서 서 있는 장면이었다. 『동아일보』는 이 사진을 입수해 3등의 남승룡 선수와 2등 하퍼 선수를 제외하고 손기정 선수만을 거의 정방형으로 오려 상단에 게재하면서 가슴에 찍힌 사각형 형태의 선명한

일장기 표지는, 테두리를 그대로 둔 채 검게 표시된 일장 마크만을 교묘히 지워버렸다. 사진에 거명게 찍힌, 해를 상징하는 일장기의 붉은 원은 흰색의 물감을 사용해 말소했으나 역시 『조선중앙일보』의 사진처럼 전송사진이기 때문에, 또는 인쇄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등의 선입견 때문에 잘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위의 <사진 1>에서는 식별이 어렵지만 손기정 가슴의 일장기 테두리는 그대로 두고 안의 붉은 원만을 흰색 잉크로 삭제하여 게재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서 이 사진이 바로 『조선중앙일보』에도 게재되었던 것과 같은 사진의 일부를 오려서 게재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최인진, 2006, 90쪽).

최인진의 이러한 주장은 지금까지 알려져왔던 사실과는 다른 새로운 주장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과연 일장기 부분을 삭제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뿐만 아니라 당시의 『동아일보』 지면은 조석간체제로서 판갈이도 이루어지고 지방판도 발행하는 등 여러 개의 판이 발행되면서 판마다 다른 지면이 발행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좀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 논문에서는 전자의 문제, 즉 과연 삭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도 어렵고 관련 증빙 자료도 없어 논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최인진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후자의 측면에 대해서 당시의 신문제작 관행에 따른 판의 변화를 비교하면서 좀더 분석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 2.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 사건의 역사적 배경

### 1) 1930년대 전반의 언론 상황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전후한 시기의 전반적인 언론의 상황과 흐름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래야만 사건의 역사적 맥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20년 민족진영을 대표하는 신문으로 창간 허가를 받은 『동아일보』는 1924년을 계기로 그 성격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해 연초부터 사설 ‘민족적 경륜’ 때문에 파문을 겪더니 이어 박춘금 사건, 기자들의 개혁운동 등을 거치면서 『동아일보』가 갖고 있던 민족진영 대표 신문의 위상이 흔들리게 되었다. 1920년대 후반부의 『동아일보』는 타협적 자치론의 민족주의 우파적 성향을 보여 신간회 운동에서도 『조선일보』가 더 주도적인 입장을 취했었다(김현대, 1987).

1930년대 들어서서 일제는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한국 언론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1936년에는 신문지법의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검열 표준을 만들었으며, 신문의 지면 개선사항 및 그 요령, 편집에 관한 지시사항 및 주의사항 등을 시달하기도 했다(김민환, 1996, 301쪽). 이러한 가운데 각 신문들의 필봉은 무너지고 대신 이윤 실현에 진력하는 상업화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민지(1978, 178~179쪽)의 분석에 따르면 1930년대 전반기 『동아일보』 사설의 주제에서 통치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대신 국제문제



나 교육·문화에 대한 내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총독부의 규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을 회피하려는 편집 방침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경영권을 둘러싸고 내용을 겪던 『조선일보』도 1933년 방응모가 인수하면서 안정을 찾았고 『조선중앙일보』도 같은 해 여운형이 맡아 제호도 바꾸면서 『동아일보』와 함께 3사 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게 되었다.

잘 알려진 대로 1920년대 후반부터 신문들은 문자보급운동을 비롯한 문화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여러 종류의 잡지들을 발행하고 단행본 출판에도 진출하는 등 초보적이거나 복합 미디어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까지 했다(채백, 2005, 60쪽). 이러한 상업화와 함께 1930년대 전반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두 신문의 광고 수주는 약 9%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장신, 2005, 171쪽).

당시 언론계의 전반적 상황은 총독부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검찰부가 작성한 ‘동아일보의 발행정지에 관한 건’(京高檢秘 제2344호)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다음과 같이 당시의 언론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만주사변을 계기로 해서 일본 국력의 재인식은 일반 조선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줌에 따라 언론지의 논조도 점차 그 필봉을 고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점도 있으나 원래 언론지는 민족적 풍자기사 게재로써 2천만 조선민중의 배경을 가진 특수신문의 생명임을 자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반 조선인의 심저에 흐르는 민족적 편견을 전부 해소시키지 않는 한 논조의 온건화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이다

1930년대 들어서 신문 지면의 논조 변화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일제 당국으로서의 아직 만족할 단계는 아니라는 평가이다. 이와 같이 민족 언론으로서의 필봉은 약화된 채 상업화 경쟁에 몰두하는 가운데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우승하는 일대 사건이 벌어지면서 언론 부문에서도 또 하나의 중대한 계기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 2) 『동아일보』의 손기정 우승 관련 보도

당초 언론들은 당시 베를린 올림픽 보도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올림픽에 관한 보도는 체육면에서 간단히 다루는 정도였다(森田芳夫, 1936, 3~4쪽). 그러나 손기정의 마라톤 우승을 계기로 논조에 변화가 나타났다.

『동아일보』의 손기정 마라톤 우승에 대한 보도는 1936년 8월 10일 호외 발행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8월 10일 저녁에 발행된 11일자 석간에서 본격적으로 손기정 우승 관련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11일자 석간을 보면 1면에 ‘세계 제패의 개가’라는 통단의 가로 제목으로 뽑고 있다. ‘세계 제패의 조선 마라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매우 경탄조의 필치로 두 선수의 업적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양군(兩君)의 우승은 곧 조선의 우승이요 양군의 제패는 곧 조선의 제패다.

조선은 양군에게 불우와 불행을 주었울뿐이로되 양군은 그래도 조선에 바치고 갔었다. 조선의 아들들이 이맘을 이는가 다 가치 이 마음을 본받자. 서로가 이 뜻을 간직하자 ……(중략) …… 이제 손, 남 양 용사의 세계적 우승은 시드는 조선의 지는 피를 구울게 하였고 짙어진 조선의 맥박을 뛰게 하였다. 그리하여 한번 이러서면 세계도 장중물(掌中物)이라는 신념과 기백을 가지도록 하였다. ……(후략).

손기정과 남승용 두 사람의 입장을 바로 ‘조선의 우승이요 제패’라고 민족적인 관점에서 부각시키고 있다. 위 사설의 표현대로 손기정의 우승은 『동아일보』의 시드는 피를 끓게 하였고 맥박을 다시 뛰게 만든 것이다. 이어 8월 12일자 조간에서도 3면의 사설을 통해 ‘손, 남 양 선수의 위대한 공헌’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업적이 갖는 의미를 높은 톤으로 강조하고 있다. 13일자에서도 ‘청년들아 이어나자’라는 제목으로 “조선은 이제야 조선의 조선이 아니라 세계의 조선이 될 첫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 모든 문화방면에 있어서 세계적 조선을 완성하여야겠다”고 소리 높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손기정의 우승 이후에는 여러 종류의 관련 기사들이 줄을 이으면서 지면의 상당 부분을

장식하였다.

나아가서 『동아일보』는 손기정의 우승을 계기로 각종 기념 사업을 시도하였다. 먼저 8월 15일자 조간 3면에 실린 사설에서는 ‘체육관을 건설하라, 세계 제패의此 기회에’라는 제목으로 손기정의 세계 제패를 기념하는 체육관을 건립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손기정의 세계 제패를 기념하는 노래 공모를 벌이기도 하였다(8월 20일자 조간 2면, 8월 21일자 조간 2면).

『동아일보』의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당시 『조선일보』와 흡사 경쟁적인 양상을 보여주었다. 『조선일보』도 8월 10일 호외 발간을 시작으로 발빠르게 8월 11일자 석간 1면을 통해서는 두 선수에게 조선일보사 명의의 상패를 수여하면서 부상으로 금일봉을 전달하기로 결정했으며 시상식은 두 선수의 귀국 후에 거행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어 11일 조간에는 ‘조선 남아의 의기, 손기정군의 장거’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 우승은 “손남 양군의 영예일뿐아니라 이천오백만 조선민족의 일대 역사적 광영이라 안홀수 업다”고 역시 민족적인 관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면서 관련 기사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특히 2면에는 동경을 통한 국제전화로 손기정과 전화 인터뷰를 시도하여 기사화함으로써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었다. 1935년 치열한 싸움으로까지 비화되었던 두 신문의 경쟁 관계(자세한 내용은 채백, 2005를 참조 바람)가 손기정 관련 보도에서도 나타났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이처럼 손기정의 마라톤 우승은 『동아일보』가 올림픽 관련 보도에 적극성을 띠고 각종 기념사업까지 벌이게 만들면서 약화되었던 민족적 관점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천정환(2005, 33쪽)이 적절하게 표현하였듯이 스포츠, 특히 손기정이 우승한 마라톤이야말로 ‘민족주의의 우회로’로서 최상의 소재였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장기 말소 사건이 배태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3. 1936년 8월 13일의 손기정 보도 사진

#### 1) 『조선중앙일보』의 보도 사진

그동안 알려진 대로 『조선중앙일보』는 1936년 8월 13일자 조간 제4면에 손기정 선수 기슴의 일장기를 삭제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당시의 지면은 아래의 <사진 2>이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측 하단에 손기정 선수의 시상식 장면 사진이 게재되었다. 사진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일장기가 삭제되었는지를 분간하기 어려웠던 탓인지 당시는 총독부 당국도 문제제기 하지 않고 넘어갔다. 하지만 이후 8월 25일자 『동아일보』의 보도가 문제 되면서 일제 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조선중앙일보』의 이 사진도 기자 유해봉이 사진 부원과 협의하여 일장기 마크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조선중앙일보 휴간 후의 경위’).

앞에서도 지적한 대로 이 사실이 최익진에 의해서 처음 제기되고 후속 연구자들도 이를 수용함으로써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 2) 『동아일보』의 보도 사진

최익진(2006)은 『조선중앙일보』가 『동아일보』에 앞서 일장기를 말소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히면서 『동아일보』도 같은 8월 13일자 지면에 『조선중앙일보』에 게재된 것과 같은 사진의 일부를 오려서 일장



<사진 2> 『조선중앙일보』 1936년 8월 13일자 조간 4면

기 마크를 삭제하고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보다 복잡한 맥락이 존재한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아일보』 1936년 8월 13일자 조간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판이 존재한다. 아래의 <사진 3>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판을 보여주고 있다. 둘 다 발행일자는 소화11년 8월 13일자 지령은 5,645호라고 인쇄되어 있으며 같은 신문 1면을 보면 좌측은 2판 우측은 1판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같은 발행일임에도 면의 내용은 판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판이하게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오른쪽 판의 좌측 상단에 실린 사진이다. 이는 바로 『조선중앙일보』의 같은 날짜 지면에 게재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으로 보인다. 다만 남승룡 선수 가슴 부분이 차이가 있다. 『조선중앙일보』 사진에서는 남선수 가슴의 일장기 마크가 안 보이나 『동아일보』 지면에서는 선명하지는 않지만 남 선수 가슴에 일장기 마크 같은 것이 보인다. 최인진의 주장대로 왼쪽 지면의 사진은 오른쪽 사진의 일부를 오려서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일부를 오려서 사용한 이유가 남 선수의 가슴 부분과 관련이



<사진 3> 『동아일보』 1936년 8월 13일자 조간 2면의 두 가지 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서로 다른 2개의 판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지면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좌측이 특정 지역, 즉 서울 일원에만 배포된 판이며 우측은 지방에 배포된 판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같은 날짜 석간 2면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아래의 사진은 『동아일보』 1936년 8월 13일 석간 2판의 2면 사진이다.

이 지면은 <사진 3>의 우측 지면과 좌측 상단의 기사를 비롯하여 일부만 다르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나 내용은 대체로 같다. 그런데 이 <사진 4>의 지면에는 우측 하단 중간쯤에 ‘금조각지천기(今朝各地天氣)’라는 제목으로 일기예보가 실려 있는데, 경성뿐만 아니라 중간진부터 평양, 대구, 부산 등 전국 14개 주요 도시의 날씨가 실려 있다. 반면 <사진 3> 좌측의 지면에는 우측 맨 하단에 ‘오늘의 천기’라는 제목으로 ‘흐렸다 개었다’라고만 소개하고 있다. 이를 보면 <사진 3>의 좌측 지면은 특정 지역에만 배포된 판이며 우측

지면은 각 지방에 배포된 지면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당시 조석간 체제에서 석간은 발행일자보다 하루 전날 인쇄되었다. 이는 신문 지면 중 1면의 제호 아래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1936년 8월 13일자 석간의 1면에 8월 12일에 인쇄되었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사진 3>과 <사진 4>를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8월 13일자 석간을 8월 12일에 인쇄하면서 이를 일부 수정하여 지방판 조간으로 발행하고 경성판 조간은 8월 13일 새벽에 발행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사진 4> 『동아일보』 1936년 8월 13일 석간 2판 2면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동아일보』도 『조선중앙일보』와 같은 1936년 8월 13일 조간 지방판에 동일한 손기정의 시상식 장면 사진이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조선중앙일보』 사진은 조간 2판이다(역사정보통합시스템 [www.koreanhistory.or.kr](http://www.koreanhistory.or.kr) 참조). 현재로서는 조간 1판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문제의 사진이 1판부터 실린 것인지 아니면 2판부터 실린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만일 『조선중앙일보』의 8월 13일자 조간 1판에 이 사진이 없었다면 『동아일보』가 더 먼저였다는 결론도 가능하다.

여기서 과연 일장기 마크를 삭제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현재 지면에 게재된 사진의 상태만으로는 삭제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조선중앙일보』와 남승룡 선수 부분을 제외하고는 별 차이없이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마크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의 사진이 실려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다. 8월 13일자 지방판에 『조선중앙일보』와 같은 사진을 실었으나 남승룡 선수 부분이 차이가 나자 경성판에는 남선수를 제외하고 손기정 선수 부분만을 오려서 게재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 4.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 사건과 그 이후의 경과

##### 1) 『동아일보』 1936년 8월 25일자의 일장기 말소

널리 알려진 대로 『동아일보』는 1936년 8월 24일에 인쇄된 8월 25일자 석간의 2판에 손기정 선수의 시상식 장면 사진을 게재하면서 일장기 마크를 삭제했다. 삭제가 이루어진 과정은 당시 총독부 경찰조사에 의하면 이길용이 이상범에게 사진을 건네주며 일장기를 흐리게 해달라고 처음 발의했다고 한다. 이상범이 이를 수용하여 원 사진에 착색을 하여 흐리게 하였지만 사회부 기자 장용서가 사진과장 신낙균과 사진부 서영호에게 보다 확실하게 말소시키자고 제의하여 서영호가 청산가리를 사용하여 추가로 말소했다는 것이다(『동아일보』의 발행정지에 관한 건).

아래의 <사진 5>가 문제의 사진이 게재된 지면이다. 1판에는 일장기 마크를 그대로 실었다가 2판에 가서 삭제한 이유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최인진(2006, 106쪽)은 3가지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일제 검열자의 눈을 속이기 위한 작전일 가능성과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 그리고 더 폭발적인 파급 효과를 내기 위해서였으리라는 가능성의 세 가지이다. 이 중 세 번째의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더 큰 효과를 노렸다면 1판부터 바꾸지 않고 계속 실는 방법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이다. 앞의 2가지 가능성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1판으로 검열 당국의 눈을 우선 피하고 2판에 넣었거나, 아니면 삭제하는 작업에 시간이 소요되어 1판 마감시간에는 못 맞추고 2판에만 넣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사진 5>에서 문제의 손기정 사진 오른쪽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지면의 일부 기사<sup>2)</sup>가 삭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전 검열을 거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 검열을 거친 이후 2판에서 손기정 사진의 일장기 마크를 삭제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일장기 마크가 삭제된 사진이 게재되어 발행되자 총독부 당국은 8월 13일의 경우와는 달리 바로 대응에 나섰던 것이다.



<사진 5> 『동아일보』 1936년 8월 25일 석간 2판 2면

2) 최인진(2006, 118~119쪽)의 분석에 의하면 이 삭제된 기사는 베를린 올림픽 영화 상영에 관한 기사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쟁점 중의 하나는 과연 사건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사건 주역 중의 한 사람인 이길용이었다. 그는 해방 직후인 1948년 회고를 통해 “사내의 사시라고할가 전통이라고할가 방침이 일장기를 되도록은 아니실었다. 우리는 도모지 실찌 않을 속심이었던 것이다”라고 말하여 일장기 삭제가 『동아일보』의 전통과 사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김사립, 1948, 梅7쪽). 이러한 입장을 동아일보사(1975, 364쪽)는 그대로 이어 받아 사시를 통해 “민족대변지를 자임해온 본보 동아일보가 그냥 무심히 넘길 수 없었던 것은 누구의 지지도 아니요 명령도 아닌 거의 자연발생적인 본보의 체질에서 우러난 것이었다”라고 언급했다.<sup>3)</sup>

이에 대해 최민지(1978, 222~223쪽)는 『인촌 김성수전』을 인용하여 당시 사건에 대해 김성수와 송진우가 크게 노하면서 관련 기자들을 크게 꾸짖었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반박했다. 최민지의 이러한 견해는 이후 『동아일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의 많은 연구들도 이어받고 있다(예컨대, 강준만, 2000, 270~271쪽이나 김민남 외, 1988, 237쪽 등 참조).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2006년 8월 25일자에서 ‘일장기 말소 의거 70주년’을 맞이한 특집 기획에서 이 사건을 ‘의거’라고 규정하면서 ‘일장기 말소는 편집국의 집단 거사’라고 제목을 뽑아 사건의 성격을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3) 『동아일보사사』은 그보다 4년 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6위에 입상했던 김은배 선수의 가슴에서도 일장기를 기술적으로 말소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365쪽). 『동아일보』는 2006년 8월 25일자의 ‘일장기 말소 의거 70주년’이라는 기사에서는 일본의 르포작가로서 이 사건을 조사하여 저술을 발행했던 鎌田忠良의 말을 인용하여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鎌田(1988, 356쪽)의 저술은 오히려 『동아일보사사』를 토대로 해서 지면을 찾아보았지만 일장기 관련 사진은 찾을 수 없고 김은배의 출신 학교인 양정을 상징하는 Y자만이 보인다면서 일장기 마크를 Y자로 바꾸었거나 유니폼을 바꾸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한편 최인진(2006, 91~92쪽)이 조사한 바도 그렇고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해도 『동아일보』 지면에서 김은배의 사진에서 일장기가 말소된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이길용은 김은배를 비롯한 당시 출전 선수를 교민들이 환영회를 베푸는 기사에서 태극기를 지우고 싶었던 사실을 회고하고 있다(김사립, 1948, 梅7쪽).

집단적인 것이었음을 다시 강조했다.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볼 때 이길용 개인만의 행위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당시 총독부 경찰의 조사 결과 및 이에 따른 규제 조치에 여러 명이 포함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길용 개인이나 동아일보사 측의 주장도 과장된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당시 발행되던 잡지 『삼천리』는 ‘중첩한 반도언론계의 불상사, 동아일보 정간 중앙일보 휴간’이라는 제목의 기사(제8권 11호, 1936년 11월, 31~32쪽)를 통해 동아일보의 정간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당시의 일반 여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사(社)의 태도였을까. 경찰에서 검거범위로 보아 이것은 수개 사원의 실행(失行)인 것이 판명되었다. 같은 손선수 사진을 지면에 내기 시작한지 7, 8차 늘 일장기가 흉간에 부튼 사진을 내든 동사가 선하심후하심(先何心後何心)으로 단 한번을 국기 말소를 하자했으리요 공회당에서 열린 동사 올림픽 영화대 회때에도 모다 일장기있는 사진이었고 또 어느 축경절에 동아, 중앙 양사 문전에 국기 안달린 때 업었다. 황태자 탄생축하회나 총독 초대회 등 어느 좌석에 신문사장 용지(容姿)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었든가. 그럼으로 이번 실행은 사의 전체의사가 아니요 오직 1, 2사원의 실행일 것이 분명하며 또는 동아일보와 같이 유력한 민간지가 아직도 배일 색채를 띠고 있다함은 총독정치에도 영향있는 일인즉 금번은 금후의 태도를 십분 계식(戒飾)한뒤 속히 해금하여 줌이 좋겠다고 일반은 희망하고 있다.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건을 평가절하하는 매우 비판적인 논조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일장기도 잘 실어오던 『동아일보』가 한두 사원의 행위로 일장기를 말소한 것이지 그 회사의 입장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 『삼천리』의 발행인 파인 김동환 시인은 후에 친일의 길을 걷게 되며 이 잡지도 1942년에는 『대동아』라는 노골적인 친일 잡지로 개제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936년 당시는 노골적인 친일 잡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전영표, 2001).

오히려 대중성을 특징으로 하는 상업적 잡지였다고 평가되고 있다(한국잡지협회, 1995, 17쪽). 실제로 『동아일보』의 당시 지면에서 일장기가 등장한 것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사건 바로 직후인 8월 25일자 조간의 8면에도 마라톤의 세 입상자 사진을 게재하였는데 손기정과 남승용 두 선수의 가슴에 일장기 마크가 선명한 채로 인쇄되어 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총독부 당국은 신속히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무기정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을 계속 구금하여 고문을 하면서까지 추궁했던 것은 이길용의 회고에 의하면 사장, 주필 등 회사 임원진의 연루 여부였다고 한다(김사림, 1948, 매8쪽).

그러나 사건은 사회부장 현진건 이하 일선 기자와 사진부원들의 행위였던 것으로 결말이 났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우리는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건이 이길용이나 『동아일보』의 주장과는 달리 회사의 전통이나 사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상층부와는 무관하게 실무 기자들 몇몇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위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 일장기 말소 사건에 대한 일제의 규제

일장기 마크를 말소한 8월 25일자 석간 2판이 발행되자 총독부 당국은 바로 대응에 나섰다. 우선 해당 신문의 발매 반포 금지를 시키고 관계자에 대한 소환에 착수하였다. 8월 13일의 두 신문 보도는 그대로 넘어갔던 일제가 이번에는 즉각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던 것이다.

일제가 이처럼 방침을 바꾸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손기정의 우승 이후 『동아일보』의 보도 태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인용한 8월 11일자 사설에서 손기정의 우승이 조선의 피를 끓게 하고 맥박을 뛰게 한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자 이에 대해 일제는 “명백히 민족의식의 양양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직 노골적으로 제국을 때려 누이고 독립의 의지를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는 생각이 어려움으로써 특히 계고를 주어 불문에 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조선출판경찰개요』, 1936년, 113쪽; 계훈모, 1979, 755쪽

에서 재인용). 『동아일보』의 보도 태도가 아직 근본적인 변화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문제삼지 않는다는 방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 태도가 지속되자 일제의 방침이 바뀌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보도가 민족 감정의 자극, 확산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제동을 걸고 나섰던 것이다. 그리하여 총독부 경찰 당국은 손기정 관련 축하회도 금지, 기념체육관 설립 발기도 금지, 연설회도 금지 조치(‘중첩한 반도언론계의 불상사’, 『삼천리』, 제8권 11호, 1936. 11., 27쪽)함으로써 손선수 우승을 민족적 활로로 승화시키려는 분위기를 차단하고 나섰다. 이로써 『동아일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려던 기념체육관 건립도 창립 발기회가 한 차례 연기되더니 당분간 추진을 중지한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동아일보』, 1936. 8. 19., 석간 2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8월 25일의 일장기 마크 사진 게재에 대해 총독부가 바로 통제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총독부가 동아일보사 기자들을 연행하기 시작한 것은 신문이 발행된 8월 24일 밤부터였다. 임병철, 백운선을 필두로 해서 27일까지 총 11명이 연행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총독부 당국은 8월 27일 오후 5시경 무기정간 조치를 취해 당시 이미 발행되어 배포 중이던 8월 28일자 석간도 차압하는 조치에 착수했다(『동아일보』의 발행정지에 관한 건). 이어서 당국은 사건 관계자 및 동아일보사에 대한 규제 조치에 착수했다. 당시 총독부는 규제 조치의 배경을 아래와 같이 밝히면서 6개항에 걸친 요구 사항을 통고했다(『동아일보 발행정지처분 해제 경위』).

원래 동아일보는 단지 금번 일장기 도말의 사진을 게재하여 조선민족의식의 고조를 선동하고 이러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평소 민족주의의 선전 기관으로서 자타 공히 임무를 맡아 기회가 되면 매번 이처럼 비국민적 거조(擧措)를 보인 것과 같이 잠재의식의 암류에 있는 것이 명백해짐에 따라 당국으로서는 금번의 사단을 계기로 그 발행을 정지시켜 반성의 여지를 주어 이를 영년(永年)의 교상(膠想)을 시정하여 근본적으로 그 지도정신을 청산시키는 것이 극도로 긴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 진실로 혁정(革正)의 가능성이

생긴 후 해정시킬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먼저 사장 이하 이번 사건에 직접 책임자 및 사원 중의 요시찰인, 요주의인 등 불량분자를 구축하여 사내의 진용과 분위기를 일신하고 또한 특히 사장 인선에 최대한 중점을 두어 온건 공정한 자를 선임하여 더불어서 혁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좌의 각항을 실행을 통고하였다.

- (1)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는 인책 사임할 것
- (2) 발행 겸 편집인 명희는 새로 사장되는 자로 변경하는 수속을 이행할 것
- (3) 사장, 부사장, 주필, 편집국장 임용에 대해서는 미리 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
- (4) 당국에 의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간부와 사원, 그리고 사건 책임자는 면직시켜 다시 같은 회사 내의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그 성명은 다음과 같다.

송진우(宋鎭禹 사장, 정요), 장덕수(張德秀 부사장, 정요), 양원모(梁源模 영업국장, 정요), 김준연(金俊淵 주필, 특요), 설의식(薛義植 편집국장, 정요), 이여성(李如星 조사부장, 정요), 박찬희(朴贊熙 지방부장, 특요), 최승만(崔承萬 잡지부주임, 보요), 이길용(李吉用 운동부장, 신낙균(申樂均 사진과장), 현진건(玄鎭健 사회부 기자), 장용서(張龍瑞 동상), 서영호(徐永浩 사진부원) 이상 13명<sup>4)</sup>

- (5) 새로 동아일보 발행 명의인이 되는 자는 당국이 지정하는 항목에 따른 지면 채신에 대해서 서약할 것
- (6) 우의 지시사항은 사장 송진우 또는 양원모에 대하여 시행하고 김성수, 송진우와 양원모의 3인은 금후 책임을 지고 일체의 처리를 수행할 것

4) 여기서 정요(政要), 특요(特要), 보요(普要)는 각각 정치요시찰인, 특별요시찰인, 보통요시찰인의 줄임말이다. 1930년대 총독부는 민족주의자는 정치, 공산주의자는 특별로 구분하고 이념에 관계 없이 ‘위험한 사상’ 소지자는 ‘보통’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구분은 위법 사실 유무에 따랐다고 한다(장신, 2005, 194쪽의 주60). 이 명단 중 현진건에 대해서는 다른 기록들은 대부분 사회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회부 기자라고 되어 있다. 아마도 착오가 아닌가 싶다.

사건 관계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간부 및 임원의 면책 사임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 간부진 임용의 사전 승인, 지면 개선 약속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언제 다시 고개를 들지 모를 민족주의적 언론의 싹을 아예 제거하려는 탄압 의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 3) 일제의 규제에 대한 동아일보사의 대응

일제 당국의 규제에 대해 『동아일보』는 일부 수용하면서도 회사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조치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았다. 당시 구속되었던 사건 관계자들은 모두 기소되지 않았다. 이는 이상범의 회고에 의하면 일본의 국기인 일장기를 모독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동아일보』, 1956. 8. 21). 대신 앞으로 언론사에 근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두었다. 하지만 당시의 신문지법을 보면 제11조에서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거나’, ‘국제교의를 저해’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6조는 ‘사회질서나 풍속을 문란케 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발행인과 편집인을 10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원 이상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굳이 찾자면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겠다. <표 1>의 명단은 1937년 5월 18일자로 동아일보사가 총독부에 보고한 문서에 나와 있는 사직자 명단이다.

<표 1>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주필과 편집국장이 정간 조치 직후인 8월 28일 사임하였다. 이는 위에서 지적한 신문지법 26조의 규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분석된다. 직접 책임을 질 사람들이기에 신속하게 사표를 제출하고 수리했으리라는 말이다. 이길용을 비롯한 사건의 직접 관련자 8명 중 6명은 9월 25일자로 사임하였다. 총독부가 요구하였던 사장은 바로 사임하지 않고 11월 11일에 열린 취체역 회의에서 사임이 결정되었으며 이날 양원모를 전무취체역이며 사장사무대리로 결정했다. 한편 김성수에 대해서는 11월 19일의 취체역 회의에서 취체역 사임안이 통과되었다(주식회사 동아일보사,

&lt;표 1&gt; 일장기 말소사건 관련 사직자

직위	성명	사직일
사장	송진우	1936년 11월 11일
부사장	장덕수	12월 20일
영업국장	양원모	12월 20일
주필	김준연	8월 28일
편집국장	설의식	8월 28일
사회부장	현진건	9월 25일
지방부장	박찬희	12월 3일
조사부장	이여성	12월 10일
잡지부장	최승만	9월 25일
사원	이길용	9월 25일
사원	장용서	9월 25일
사진과장	신낙균	9월 25일
동 고원	서영호	9월 25일

\*출처: 『동아일보사』(1975), 366쪽.

『大正八年九月以降 取締役會議錄』, 77~79쪽).

위의 현황 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아일보는 당시 총독부의 압력에 일면 순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을 끌면서 비협조적인 대응을 보여 주었다. 총독부 조치의 핵심적 의도는 동아일보사로부터 김성수와 송진우를 분리시켜 환골탈태시키려는 데 있었던 반면 두 사람으로서도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었기 때문에 인사 문제도 그렇고 정간 조치도 오래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김성수는 송진우가 사장에서 물러난 뒤에 본인과 그 처, 그리고 그 외 1인 소유의 주식 4,710주를 무상이자 무조건으로 송진우에게 양도하였다(『동아일보발행정지처분의 해제에 이른 경과』). 원래 1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송진우는 이로써 4,810주의 대주주가 되었다. 이는 분명 사장의 지위를 그만둔 송진우로 하여금 대주주로서 사내 영향력을 확보하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당시 총독부는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김성수가 나서서 총독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수습에 적극 임해줄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김성수로서는 자신의

로 하여금 회사에서 손을 떼게 만들려는 총독부의 의도를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당시 경찰 문서는 김성수가 스스로 출두하여 금후의 선처를 맹서하고 과거의 죄과를 사죄하며 발행의 모든 책임을 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끗하게 처리하지 않고 “절대 사장으로서는 당국에 출두(出局)도 않으며 내부에 있어서도 동아일보사와 관계 없다”고 말하면서 그 증거로써 “본인과 그 처, 그리고 그 외 1인 소유의 주식 4,710주를 무상이자 무조건으로 송진우에게 양도한 행위를 들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동아일보발행정지처분의 해제에 이른 경과』).

또한 동아일보사 측은 후임 사장으로 양원모, 장덕수, 고재욱, 김용무(金用茂), 김병로(金炳魯), 김연수(金季洙), 문상우(文尙宇) 등을 추천했다. 김연수와 문상우는 당국으로서도 용인할 만하다고 판단했으나 본인들이 거절하였고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는 총독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독부로서는 양원모와 장덕수는 사건 당시 간부였으며 고재욱은 김성수의 인척이고 김용무는 보성전문학교장으로서 김성수의 심복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열렬한 공산계 민족주의자인 김병로는 김성수와 동향인이기 때문에 김성수와 송진우의 하수인 역할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동아일보발행정지처분의 해제에 이른 경과』). 총독부로서는 이들을 추천한다는 것은 김성수와 송진우가 여전히 동아일보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파악했던 것이다.

『동아일보』의 정간이 유례없이 길어지면서 답보 상태를 보이자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이 떠돌았던 것 같다. 총독부 당국은 이를 『동아일보』가 유포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 유언비어의 내용은 “당국은 당초부터 해정의 의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며 무단정치가 재현된다”거나 “현 중역을 제외하고 사장을 선임하는 때에는 필경 동아일보는 자멸하기에 이를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은 폐간하고 전업(轉業)하는 것만 못하며 이렇게 되면 당국은 궁지에 빠질 것”이라는 내용, 혹은 “당국이 드디어 굴복하여 곧 속간을 허용하기로 내정되었다”는 내용들이었다(『동아일보발행정지처분의 해제에 이른 경과』). 이 밖에도 여러 소문들이 떠돌았던 것 같다. 1935년 3월 15일 중국 중경에서 창간된 한국국민당 기관지 『한민』(한국신문연구소 편, 1975, 176쪽) 1936년



11월 30일자에 실린 ‘동아중앙양신문 정간후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총독부가 신문의 체질을 바꾸고 간부를 바꿀 것을 요구하면서 주필을 일본인으로 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처럼 총독부와 동아일보사의 대립이 장기화되자 갖가지 소문들이 꼬리를 물고 퍼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일장기 말소 사건을 계기로 해서 총독부 당국은 『동아일보』를 김성수와 송진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꾸어 민족적 성향을 완전히 탈색하고 총독부 정책에 협조적인 언론으로 만들려고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김성수와 송진우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그리하여 사건 후 『동아일보』는 사건 관계자나 일부 간부를 사직시키고 근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였으나 후임 사장 추천 등의 문제로 총독부와 대립함으로써 정간이 장기간 지속되었던 것이다.

#### 4) 『동아일보』 정간 해제의 배경과 경위

이러한 답보 상태로 말미암아 일장기 말소로 야기된 『동아일보』의 무기정간은 9개월 6일간<sup>5)</sup>을 끌어 1937년 6월 2일에야 해제되어 그날 저녁에 3일자 석간부터 다시 발행되었다. 이렇게 9개월여 만에 속간이 허용된 것은 총독부 당국과 동아일보사 간의 대립이 시일을 끌어도 총독부의 방침에 변화가 없자 동아일보사가 총독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살펴본다.

양자 간에 대립이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자 총독부는 최후의 수단을

---

5) 무기정간 기간에 대해서도 『동아일보』는 11개월이라고 서술하고 있다(2006. 8. 25. A8면, 이외에도 1980년과 1995년의 창간 특집에서도 역시 정간 기간을 11개월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정간 기간이 1936년 8월부터 1937년 6월까지라고 월단위만 계산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8월 말인 27일부터 정간에 들어가 이듬해 6월 2일부터 속간되었으니 실제 정간 기간은 9개월 6일간이 맞다. 이 계산은 『동아일보』 속간호인 1937년 9월 3일자 석간 1면에 실린 ‘속간에 임하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강구하고 나섰다. 1937년 5월에 들어서면서 총독부 방침에 응하지 않으려면 폐간계를 제출하라고 통고하였던 것이다(『동아일보발행정지처분의 해제에 이른 경과』). 만일 발행정지 상태가 계속되어 1년 2개월을 넘게 되면 당시 신문지법에 의해 발행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신문지법 제7조를 보면 “발행정지 기간은 1개년을 과(過)함이 부득(不得)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9조는 “발행정지의 최종일로부터 2개월을 과(過)하여 발행치 아니하는 시(時)는 발행허가의 효력을 실(失)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최기영, 1991, 267쪽).<sup>6)</sup> 신문이 폐간되는 극단적인 상황은 양자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실질적인 방안 모색에 나서게 되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이에 총독부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으며 『동아일보』가 이를 수용하여 타협적 태도로 나오게 된 것이다. 동아일보사로서는 장기 정간에 따른 회사의 재정 손실, 사원들의 개인적 어려움 등으로 정간이 더 이상 계속된다면 여러 모로 어려운 형국이었을 것이다. 동아일보는 바로 중역회의를 소집하여 백관수(白寬洙)와 옥선진(玉璿珍)의 2명을 사장 후보로 제시하고 이어 5월 12일에 다음과 같은 청원서(御願書)를 총독부 경무국장 앞으로 제출했다(『동아일보발행정지처분의 해제에 이른 경과』).

금번의 불상사에 있어서는 대단히 공축(恐縮)을 견딜 수 없어 정간 후 이미 10개월이 지나 본사를 비롯하여 전 조선에 걸친 수천의 지분국 가족의 생활의 궁상은 실로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스스로 잘못하여 그리 된 것으로서 면목이 없는 일……(일부 판독 불가)…… 이를 과거의 거울로 삼아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이 없도록 깊이 반성하고 회오(悔悟)하오니 각별한 동정과 관대한 양찰(諒察)을 바라나이다.

본건의 해결에 대하여는 당국의 의향을 명심하여 따르겠으니 저희에게 부디 빠른 시일 내에 해금시켜 주실 것을 간절하게 간원하나이다.

후임 사장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로 고심을 다하였지만 금후 경영의 관계상

6) 당시 자진 휴간에 들어갔던 『조선중앙일보』가 결국 속간되지 못한 것도 바로 이 조항 때문이다(김민환, 1996, 235쪽).

신뢰할만한 자가 별로 없는 관계로 그간 올린 바 있는 후보자 중에서 특별히 권할 사람을 지정해주시면 그에 따라 올리겠습니다.

이 청원서에 의하면 『동아일보』로서는 이제 당국의 의사를 따르겠으니 선처하여 달라는 의도를 알 수 있다. 이에 총독부는 아래의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백관수가 사장되는 것에 동의하기로 하였다(『동아일보발행정치처분의 해제에 이른 경과』).

一. 서약서를 제출할 것(그 내용의 개요는 좌와 같으며 별지 제1 참조)

- (1) 지도정신의 시정
- (2) 지면쇄신개선요항의 준수(별지 제2항 참조)
- (3) 불량사원의 정리와 재임용의 승인(前示 13명 지명)
- (4) 사장 즉 발행명의인의 원칙 엄수
- (5) 사장, 부사장, 주필, 편집국장의 임명 및 해임의 승인
- (6) 우 서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의 제재

一. 전사장 소유주식을 새사장에게 양도할 것

一. 전사장은 취체역을 사임할 것

一. 해정에 즈음하여 사고를 게재할 것(별지 제3 참조)

위의 정간 해제 조건을 보면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약속을 담은 서약서와 사고를 발표하는 외에 김성수와 송진우를 겨냥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취체역을 사임하고 주식을 새사장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동아일보』로부터 완전히 손을 떼라는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요구를 동아일보사가 받아들임으로써 양측은 합의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송진우의 주식 4,810주 중 4,000주를 백관수에 양도 수속을 마치고 5월 31일 임시주주 총회 석상에서 취체역 김성수 및 송진우 두 사람은 인책 사임하고 대신 백관수와 현준호(玄俊鎬, 중추원 참의)를 취체역으로 선임한 후 바로 중역회를 열어 백관수를 사장으로 선임했고 여기에 필요한 법적 수속도 정식으로 마치게

되었다. 신임 사장 백관수는 총독부와 약속한 서약서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표하고 이어 속간호인 1937년 6월 3일자 석간 1면에 사고로 아래의 내용을 게재하였다.

### 서 약 서

본사가 발행에 관계하는 일간신문 동아일보에서 앞서 일장기말소사건을 야기한 것은 참으로 공구(恐懼)함을 금할 수 없던 차에 새 사장에 대하여 발행인으로서 허가받고 발행정지처분해제의 은명(恩命)을 받았으므로, 종래 잘못된 민족적 지도 정신은 이를 바로 청산하는 것은 물론 언론기관의 중대한 사명에 모범이 되고 나아가서 황실국가에 충근(忠勤)을 다하여 성의로써 조선통치에 익찬(翼贊)할 것을 방침으로 별지 항목에 따라 서약하고 지면의 쇄신을 실행함에 과오가 없을 것을 기한다. 더욱이 금번 정리를 명받은 간부 및 사원은 속히 면출(免黜)시키고 금후 당국의 승인없이 다시 재선임이나 임명하지 않으며 또한 사장, 부사장, 주필, 편집국장의 선임에 대해서는 당분간 당국의 승인을 받으며 동시에 발행명의인이 곧 사장이 되는 원칙을 엄수할 것을 서약하며 부당행위가 없도록 한다. 만일 우에 위반하는 때는 여하한 처분도 받는다는데 이의가 없음을 서약함.

### 사 고

낭자(曩者) 본보에서 일장기 마크 말소사건을 야기하여 당국의 기위(忌諱)에 촉(觸)하게 된 것은 실로 공축불감(恐縮不堪)하는 바이다.

이제 당국으로부터 발행정지해제의 관대한 처분을 받아 금후부터 일층 근신하여 경(更)히 여사(如斯)한 불상사를 야기치 안도록 주의할 것은 물론이어나와 지면을 쇄신하고 대일본제국의 언론기관으로서 공정한 사명을 다하여써 조선통치의 익찬을 기하려 하오니 독자제위께서는 특히 조량(照亮)하시와 배전 애호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민족적 지도정신을 청산하고 황실국가에 충성하여 조선 통치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서약하고 지면을 통해 공표한 것이다. 이 밖에도 총독부가 제시한 조건대로 ‘황실기사는 특히 그 취급을 정중히 하여 지면의 상단 중요한 장소에 근기(謹記)하고 또 오자·탈자 등이 없도록 할 것’을 필두로 하여 18개항에 이르는 언문신문지면쇄신요항<sup>7)</sup>의 준수를 서약하였다.

이로써 동아일보는 오랜 정간에서 벗어나 다시 신문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성격은 과거와는 판이한 모습이였다. 장신(2005, 189~190쪽)은 이를 민족이나 기업이나의 갈림길에서 ‘민족언론의 간판’을 내리고 기업으로서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그 이전의 성격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이 일장기 말소 사건에 따른 정간을 계기로 해서 『동아일보』는 지면을 통해 스스로 “대일본제국의 언론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 5. 일장기 말소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

지금까지 1936년 8월의 일장기 말소 사건을 당시의 언론 상황과 사건 이후 총독부의 규제와 『동아일보』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일장기 말소는 『동아일보』도 『조선중앙일보』와 같은 날짜인 8월 13일에 같은 사진을 게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사실은 최인진도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그는 1개의 판만을 보고 내린 결론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 『조선중앙일보』의 8월 13일자 조간 1판과 2판의 비교가 안 되어 확실한 결론은 어렵지만 최소한 『동아일보』가 『조선중앙일보』보다 늦지는 않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 사진의 삭제 여부를 판명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손기정 선수 가슴의 일장기는 안 보이는 사진이었다.

7) 이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발행정지처분의 해제에 이르는 경과』를 참조하기 바람.

두 번째로는 손기정의 마라톤 우승 소식 이후 『동아일보』의 보도 태도가 다소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1930년대의 언론은 상업화에 몰두한 채 지면에서 민족적 저항성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형국이었다. 그러나 손기정의 우승을 계기로 민족성이 되살아나는 보도들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총독부 당국도 처음에는 그냥 묵인하다가 이와 같은 보도가 지속되자 방침을 바꾸어 견제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일장기 말소 사건에 대한 규제도 이루어졌던 것이다.

세 번째는 일장기 말소에 대한 총독부 당국의 통제 의도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김성수와 송진우가 『동아일보』로부터 완전히 손을 떼게 함으로써 환골탈태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동아일보』가 그동안 당초 창간 때의 명분과는 달리 굴절된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부의 입장에서는 언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잠재적인 위협을 안고 있는 존재로 파악됐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동아일보』를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만들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네 번째는 총독부의 규제에 대한 『동아일보』의 대응에 관한 것이다. 『동아일보』는 총독부가 제시했던 여러 가지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대립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앞에서 지적한 총독부의 통제 의도를 『동아일보』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김성수와 송진우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동아일보』의 무기 정간이 유례없이 9개월이 넘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마지막으로 9개월이 넘는 정간 끝에 『동아일보』가 속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 속에서 타협적인 태도로 선회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간이 더 이상 지속되면 재정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당시 신문 지법에 의해 폐간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독부도 최후 통첩을 하게 되었고 『동아일보』가 이에 반응함으로써 속간호를 낼 수 있었다.

이후 1930년대 후반의 언론이 노골적으로 친일에 앞장섰다는 사실은 그동안 여러 연구들에 의해서도 많이 논의되어온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1920년 창간 이래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대 대표적인 신문이었던 『동아일보』

는 일장기 말소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민족주의적 보도를 다시 시도하였지만 일제의 통제에 직면하면서 그동안 표방해왔던 민족언론의 간판을 내리고 대일본제국의 언론기관으로서 공공연히 친일에 앞장서는 굴절된 언론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또한 일제는 『동아일보』의 정간이 해제된 직후인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언론 통제를 더욱 강화했고 1938년부터는 언론통폐합 계획에 착수하였다(박용규, 2001, 207쪽). 이에 따라 한국 신문들은 기관지와 거의 다름없는 편집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940년에 폐간당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 Ⅱ 참고문헌

-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민』.
- ‘『동아일보』 게재의 손기정사진중 국기표장 말소에 관한 건’(地檢秘 제1280호). 『경찰정보첩』(소화11년), 1936. 8. 28.,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istory.go.kr/openUrl.jsp?ID=ha\\_d\\_181\\_0800](http://www.history.go.kr/openUrl.jsp?ID=ha_d_181_0800) (2007. 4. 18).
- ‘『동아일보』의 발행정지에 관한 건’(京高檢秘 제2344호). 『경찰정보 寫(副本)』(소화11년). 1936. 8. 29.,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istory.go.kr/openUrl.jsp?ID=ha\\_d\\_180\\_0250](http://www.history.go.kr/openUrl.jsp?ID=ha_d_180_0250) (2007. 4. 18).
- ‘동아일보 발행정지처분 해제 경위’ 경성지방법원검사국(1937). 『思想に關スル情報綴』,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www.nanet.go.kr/](http://www.nanet.go.kr/) (2007. 4. 17).
- ‘동아중앙양신문 정간후소문’. 『한민』, 1936년 11월 30일자,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www.i815.or.kr](http://www.i815.or.kr) (2007. 3. 15).
- ‘조선중앙일보 휴간 후의 경위’ 송부에 관한 건’ 경성지방법원검사국(1937). 『思想に關スル情報綴』,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www.nanet.go.kr/](http://www.nanet.go.kr/) (2007. 4. 17).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정팔년구월이강(以降) 취체역회결의록.
- 강준만 (2000). 『권력변환』. 서울: 인물과사상사.
- 계훈모 (1979). 『한국언론연표』(1881~1945). 서울: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 김민남 외 (1993). 『새로 쓰는 한국언론사』. 서울: 아침.
- 김민환 (1996). 『한국언론사』. 서울: 나남
- 김사림 편 (1948). 『신문기자수첩』. 서울: 모던출판사.
- 김현대 (1987). 일제하 동아일보의 민족운동사적 고찰: 문화정치기간(1920-1928)의 사설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동아일보사 (1975). 『동아일보사사1』. 서울: 동아일보사.
- 모창배 (1998). 일장기 말소사건과 민족운동. 『교육과학연구』(청주대 교육과학연구소), 제12집, 223~237.
- 박용규 (2001). 일제 말기(1937-1945)의 언론통제정책과 언론구조변동. 『한국언론학보』, 46-1호, 194~228.
- 성준덕 (1955). 『한국신문사』. 서울: 신문화회.
- 역사정보통합시스템 [www.koreanhistory.or.kr](http://www.koreanhistory.or.kr)
- 이인숙 (1996). 두 기자의 이십전십, ‘깨끗이 지워버려’. 『신동아』, 11월호, 506~521.
- 장신 (2005). 1930년대 언론의 상업화와 조선·동아일보의 선택. 『역사비평』, 70호(봄), 164~196.
- 전영표 (2001). 파인의 <삼천리>와 <대동아>지의 친일성향 연구. 『출판잡지연구』, 제9권 1호, 32~48.
- 정진석 (1975). 『일제하 한국언론투쟁사』. 서울: 정음사.
- 정진석 (1990). 『한국언론사』. 서울: 나남.
- 주동황 외 (1997). 『한국언론사의 이해』. 서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 중첩한 반도언론계의 불상사, 동아일보정간 중앙일보휴간. 『삼천리』, 제8권 11호, 1936년 11월, 26~33.
- 채백 (2005). 『한국언론수용자운동사』. 서울: 한나래.
- 천정환 (2005). 『끝나지 않는 신드롬』. 서울: 푸른역사.
- 최기영 (1991). 『대한제국시기 신문연구』. 서울: 일조각.
- 최민지 (1978). 『일제하 민족언론사론』. 서울: 일월서각.
- 최인진 (2006). 『손기정 남승룡 가슴의 일장기를 지우다: 조선중앙일보·동아일보 일장기 말소 사건의 새로운 진실』. 서울: 신구문화사.
- 최준 (1965). 『한국신문사』. 서울: 일조각.
- 한국신문연구소 편 (1975). 『한국신문백년: 사료집』. 서울: 한국신문연구소.
- 한국잡지협회 (1995). 『한국잡지100년』. 서울: 한국잡지협회.



- 鎌田忠良 (1983). 베를린올림픽과 일장기말소사건. 『신동아』, 9월호, 304~315.
- 鎌田忠良 (1988). 『日章旗とマラソン』. 東京: 講談社.
- 森田芳夫 (1936). 『孫選手のマラソン優勝と日章旗マーク抹消事件』. 경성: 綠旗聯盟.

(최초 투고 2007.5.23, 최종 원고 제출 2007.7.31)

## A Study on the Erasure of Japanese National Flag in *Dong-A Ilbo*

Baek Chae

Professor

Dept. of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

This study tried to reevaluate the Erasure of Japanese National Flag in *Dong-A Ilbo*. In spite of its historical significance, this event was not explored thoroughly by researchers. While it was known as *Chosunjoongang-Ilbo* erased the Japanese National Flag earlier than *Dong-A Ilbo* on August 13 1936, but this study found out that *Dong-A Ilbo* erased the Japanese National Flag in the local morning edition of the same day. With the victory of Kijeong Son in the Berlin Olympic Marathon the nationalistic coverage of *Dong-A Ilbo* seemed to be revived. And this change caused the severe suppression by the colonial Japanese government. The government intended to eliminate the influences of Seongsu Kim and Jinwoo Song to make *Dong-A Ilbo* more cooperative partner. But because the intention of the government was not acceptable to two men, *Dong-A Ilbo* posed a noncooperative stance. This resulted in the longest suspension over 9 months. Finally with the change of stance to a compromising one, *Dong-A Ilbo* could be released from the longest suspension on June 3rd, 1937.

Key words: Erasure of Japanese National Flag, *Dong-A Ilbo*, Kijeong Son, Media History, Japanese Colonial Period